2010 외교백서



2009년 한 해 우리는 세계경제위기, 북한의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로 인한 어려운 대외 환경과 숱한 도전 속에서도 외교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북한 핵문제 관련 우리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신행정부와는 긴밀한 협력관계 및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6월 동맹미래비전을 채택하는 등 한·미 전략동맹을 심화·발전시켰습니다. 또한 9월에 출범한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와도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와 상호 신뢰를 제고해 왔습니다.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이 회의의 3국내 개최를 정례화함으로써 3국 간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인근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실질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아시아 외교'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다자외교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제2, 3차 G20 정상회의에서 G20 의장단 국가로 활동하면서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결과,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작년 11월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선진 공여국 대열에 진입함으로써 우리 ODA 집행체제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하고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UN PKO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하였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안보리 의장성명 및 결의 1874호 채택 과정과 이행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이끌어내었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였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와 5자의 상응 조치들을 단일 합의로 타결한다는 일괄타결 방안(Grand Bargain)을 제의하여 관련국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해외 수출시장 확보와 우리 경제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한·EU FTA를 타결하고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체결함으로써 인구 17억 이상의 거대한 해외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에너지 협력 외교를 활발히 추진하여 작년 12월에는 우리 기업이 UAE 원전 수주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동아시아 기후포럼, UN 총회,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부각시킨 것도 외교적으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 700만 명과 연간 해외여행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재외국민 안전 및 영사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안전정보와 여행경보단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추가로 체결하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세계경제위기, 기후변화, 테러리즘, 에너지·자원 부족과 같은 범세계적 문제의 영향이 보다 확산되고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실용외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 더 큰 대한민국' 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2010년 외교백서가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7월

외교통상부장관 유 명 환

Contents

1. 2009년 국제 정세

제1절 국제 정세 개관 10

제2절 외교정책 기조 19

2. 한반도 평화·안보 확보

제1절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추진 24

제2절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33

제3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42

제4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구축 51

3.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제1절 신아시아외교 58

제2절 유럽 지역외교 67

제3절 중남미 지역외교 80

제4절 아프리카·중동 지역외교 86

제5절 지역 간(inter-regional) 외교 94

4. 경제·통상 외교 강화

제1절 세계 금융·경제위기 대응 외교 104

제2절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110

제3절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126

제4절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외교 131

제5절 양자·다자 통상외교 138

제6절 통상투자진흥외교 163

5. 국제사회 내 역할과 위상 제고

제1절 ODA 확대 및 선진화 172
제2절 유엔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확대 184
제3절 선진 문화외교를 통한 국격 제고 204
제4절 대외관계의 법적 기반 확충 214

6. 대국민 서비스 강화

제1절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 권익 증진 222
제2절 국민편익을 위한 영사서비스 강화 236
제3절 국민과의 소통 강화 243

7. 외교 역량 강화

제1절 조직개편 및 재외공관 역량 강화 250
제2절 선진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 252
제3절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제도의 내실화 255

부록

1. 외교통상부 조직도 260
2. 외교관계 수립 현황 262
3. 재외공관 현황 264
4.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266
5. 경제통상 관계 현황 271
6. 2009년 양자·다자조약 발효 현황 273
7.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 276
8. 재외동포 현황 278
9. 해외이주 현황 279
10.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280
11. 2009년 주요 국제관계 일지 281





1

2009년 국제 정세

제1절 국제 정세 개관 10

제2절 외교정책 기조 19

제1절

국제 정세 개관

1. 국제 정치 정세

개관

2009년에는 세계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문제 논의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선진 서방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G8 정상회의(Group of 8 Summit)[1]에 비해,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2]가 세계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부상하였고, 세계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 바 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도출하는데 실패하고, 정상들의 정치적 지침으로서 '코펜하겐 합의'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 예정인 제1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협상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규모 자연재해, H1N1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도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1) 1973년 오일쇼크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975년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6개국 정상이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76년 캐나다, 1997년 러시아가 공식 가입

2)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G8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2008년 11월 G8,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EU 의장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터키 간 제1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

미국과 일본에서는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2009년 1월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경제위기 대응, 이슬람 세계와의 관계 재정립, 미·러 관계 재설정 등 다자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 내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에서는 2009년 9월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여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동맹 구축과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 등 대아시아 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9년에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및 북한 핵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주요 국제문제는 해결을 위한 뚜렷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여전히 국제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라크에서는 폭탄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황 역시 호전되지 않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알카에다 세력이 예멘 등 아라비아 반도와 소말리아를 위시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테러 위협이 증가하였다.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주창, 미·러 간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후속협상 개시 등 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은 핵개발 추진을 지속함으로써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내 정착촌 건설 및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지역별 동향

유럽에서는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향후 EU 통합 가속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직 신설 및 유럽대외관계청 신설 추진으로 EU 제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회원국이 주권 및 국가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EU 통합 진전은 회원국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2009년 4월 정상회담에서 NATO의 목적과 역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새로 규정하는 '신전략개념' 공식문서 도입에 합의하고, 2010년 말 채택을 목표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NATO는 지난 10년간 강화된 EU의 안보·방위 기능과의 조화를 모색 중이다. EU는 미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2008년 12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헌장(ASEAN Charter) 채택 후 이 헌장이 목표로 제시한 2015년 ASEAN 공동체 출범을 위하여 ASEAN 상주대표부 설립 및 가동, ASEAN 정부간인권위원회 출범(AICHR: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SEAN 사무국 조직 확대 개편 등 법적·제도적 준비 작업이 추진되어 왔다. ASEAN은 2009년 두 차례의 G20 정상회의 참가, 제1차 미·ASEAN 정상회의 개최 등 대외관계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ASEAN의 정체성 제고 및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남아 지역은 2009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내 탈레반 및 알카에다 세력에 의한 테러공격으로 지역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타밀 반군 진압에 따른 스리랑카 내전 종식과 같이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2008년 11월 27일 뭄바이 테러사태 이후 냉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2009년 4~5월 총선 결과 국민회의당 연합의 승리로 만모한 싱 총리가 재취임하였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09년 8월 실시된 대선에서 카르자이 대통령이 재선되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2009년에 치러진 온두라스 대선과 칠레 대선 1차투표 및 2010년 1월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우파 후보가 승리하면서, 좌파 정부가 지배적이었던 중남미 정치 판도에 우파세력의 재기 가능성이 노정되었다. 온두라스에서는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의 연임제한 철폐 시도에 반발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여 대통령이 축출됨으로써 2009년 11월 잠정정부 하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로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11월 우루과이 대선에서는 바스케스 후보가 당선되고 12월 볼리비아 대선에서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재선되었다.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3] 정회원국 가입안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 이어 2009년 12월 브라질 의회를 통과했으나, 파라과이 의회는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

한편 2008년 5월에 공식 출범한 남미국가연합(UNASUR)은 8월에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금융위기 공동 대처방안, 온두라스 쿠데타 규탄, 콜롬비아 내 미군 증강 문제 등 역내 쟁점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등 역내 통합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카이로 연설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이슬람권 화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중동평화 정착을 위한 뚜렷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은 정착촌 건설에 관한 이스라엘측 입장 등에 따라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대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파타(Fatah)-하마스(Hamas) 간 분열과 대립이 지속되었다. 이라크에서는 12월 선거법 개정이 합의됨에 따라 종파 간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0년 3월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란은 6월 실시된 대선 이후 민주화 시위가 발발한 데 이어, 제2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분위기가 조성되어 대내외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또 예멘에서는 북부의 반군분쟁, 남부의 분리주의 운동, 알카에다의 세력 확장 등 문제로 정치·안보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방·이슬람 간의 화해 노력, 미·시리아 간 관계 정상화 추진, 레바논 연정 구성 성공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마다가스카르, 기니 등 정부 전복이 일어나거나 사헬 지역 등 테러리즘의 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도 있지만 수단과 소말리아를 제외하면 고강도 분쟁 지역은 거의 사라지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는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가나, 세네갈, 보츠와나 등은 정치적 안정 속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등이 안정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국가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5월 신정부를 수립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최초의 월드컵 개최국이 되었다. 아프리카 통합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아프리카연합(AU)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등 지역 공동체의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2. 국제 경제 정세

2008년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는 2009년 2월 미국의 7,800억불 규모 경기부양책 등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통해 2009년 후반 진정 국면에 들어섰으나, 경제회복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로 여전히 IMF 등 국제 금융제도 개혁, 금융규제 개혁, 출구전략[4] 시행 시기, 세계무역 불균형 시정 등과 관련하여 국가 간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09년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부상하였다. 2009년 4월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 시 참가국 정상들은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9월 제3차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경제회복 지속 및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틀(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국은 민간저축 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경상수지 흑자국은 국내소비와 투자 진작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에는 중국,인도[5] 등 아시아의 거대 신흥 경제국들이 높은 성장률로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는 보다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0.8%를 기록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경제권의 경제성장률은 -3.2%를 기록한 데 비해, 신흥 경제국 및 개도국 경제권은 2.1%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 등 역내 주요 국가의 경기부양책 실시에 힘입어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나타내었다. 중국은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8.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미국은 2009년 -2.5%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미국 경제는 경기 부양 정책, 금융시장

4)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한 팽창적 거시경제정책을 원상 복귀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경제회복 속도가 빠른 국가의 경우 출구전략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높은 인플레이션 발생 위험이 따르는 반면, 경제회복 속도가 느린 국가의 경우 출구전략이 조기 시행되면 경기침체 재발도 우려

5) 중국은 8.7%, 인도는 5.6%의 경제성장률 기록(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개선, 수출 수요 증가, 주택시장 안정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10%대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2009년 -4%의 성장을 기록한 EU는 팽창적 재정·통화정책에 의한 금융여건의 개선, 신흥 경제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교역규모 확대 등으로 회복세에 있으나,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국내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완만한 경기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09년 -5.3%의 성장을 기록한 일본 경제는 재정여력이 부족하여 내수 부진, 고용 부진의 장기화 및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여타 아시아 지역의 빠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여건이 좋은 상태이다.

러시아의 경우 2009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9%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중남미 지역은 2009년 -2.3%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거시경제 펀더멘탈의 공고화로 과거에 비해 금번 경제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지역 경제는 2009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에 들어선 브라질을 중심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에 따른 유가 하락과 건설·플랜트 시장 위축으로 침체되었던 중동 경제는 11월 두바이 월드의 채무지불 유예 선언으로 충격에 휩싸였으나, 아부다비의 100억 불 규모 지원으로 곧 안정되었다. 2009년 말부터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유가가 배럴당 70불 이상까지 회복되었고 투자도 호조를 띰에 따라 동 지역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연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던 아프리카 경제는 2009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어, 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아프리카의 많은 저소득 국가들은 세계경제에 충분히 통합되어 있지 않아 세계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제한될 수 있었고, 2010년에는 다시 4.75%, 2011년에는 6%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가 하락의 영향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앙골라 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제2의 산유국)의 경우 수년째 이어 오던 두 자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나 나이지리아는 비석유 부문의 강세로 5.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2009년 초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정책 재검토로 미국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농업,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규제,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 간 입장차이를 굽히지 못해 정체된 상태이다. 2009년 7월 라퀼라 G8 정상회의에서 2010년 DDA 협상 타결 목표를 설정하면서 2009년 하반기에 DDA 협상이 다시 활성화되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다.

3.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심각한 도발을 거듭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리 의장성명과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이끌어 냈다. 한편,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 12월 보스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2009년 북한은 대내적으로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세 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 1월 전면대결 태세 선언, 정치·군사 합의 무효화 선언, 3월 개성공단 출입 차단 등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대남 대결국면을 부각시켰다. 북한 경제는 UN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등 대북제재 강화와 국제지원 축소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관찰되며, 경제난 타개를 위해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실시 등 강제노동을 동원하고 11월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계획경제 복원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로 3국 협력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2009년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과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한편, 미·일 동맹관계 조정, 중·일 협력관계 모색 등 강대국 간 역학 관계에서도 조정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부시 행정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일본 방문 시 행한 '대아시아 정책 연설'에서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변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실제로 미국은 2009년 ASEAN 우호협력조약에 서명하여 ASEAN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2009년 7월 워싱턴에서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하여 중국과의 적극적·포괄적·협력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고 9월 16일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가 일본 총리로 선출됨에 따라 자민당과의 정권 교체에 성공하였다. 하토야마 정부는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동맹 구축과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같이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한편, 하토야마 정부가 2006년 미·일 간에 합의한 후텐마 미군기지의 나고시 이전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미·일간에는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중 양국 간에는 하토야마 정부 출범 이후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2009년 말 최초로 해상구난 연습을 함께 실시하는 등의 양국 간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

중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티베트 사태 50주년, 천안문 사태 20주년 등 정세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었으나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가적 통합 강화에 주력하였다. 한편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고된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은 수동적이고 대응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외교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중·러는 경쟁 속에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에 외교적 역량을 적극 기울이면서 국가이미지 제고 등 소프트파워 강화 외교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2008년 5월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 취임 이래 3不정책(독립 不추진, 통일 不추진, 무력 不사용)을 양안정책 기조로 천명하고, 3通(통상[通商], 통우[通郵], 통항[通航])의 전면적 실현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중국도 대만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1998년 이래 중단되었던 양안회담 등 대화창구를 재개하여 적극 호응하였다. 2008년 6월, 2008년 11월, 2009년 4월, 2009년 12월에는 중국 해협회와 대만 해기회 간 4차례에 걸친 양안회담이 개최되어 경제협력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는 등 양안간 경제협력이 심화·확대되었다.

러시아는 경제구조 개선 등 '국가 현대화' 달성을 위해 실용주의적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태지역에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정상회의를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고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송유관 건설 등 자원개발과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아시아와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중·러 수교 60주년 및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2009년 11월 '유럽안보조약' 체결 제안을 통해, NATO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대표되는 유럽안보체제를 대체할 유럽 신안보체제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미·러 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부 유럽 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포기 결정 등 대러 관계 재설정 노력에 따라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어, 양국은 2009년 12월 만료된 미·러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의 후속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였다.

제2절

외교정책 기조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대외환경 속에서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2009년 「우선추진 외교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 국제사회 내 역할과 위상 제고, 대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을 「지속추진 외교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하에서 한 해 동안 아래와 같이 주요한 외교성과를 거두었다.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고화

2008년에 격상, 강화된 주변4국과의 관계를 보다 튼튼히 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하였다. 미국과는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긴밀한 유대·신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2009년 6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동맹미래비전'을 채택하여 미래지향적 전략동맹 발전 구상을 구체화시켰다. 10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상설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여 3국 정상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및 5월 2차 핵실험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여,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과 결의 1874호 채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2.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통상외교에 주력하였다.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자원부국과의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한·EU FTA 타결 및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 한전의 UAE 원전 수주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외교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주요 국제회의 계기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녹색성장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3. 신아시아 외교 추진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신아시아 외교를 중점 추진하여 동남아, 중앙아, 서남아 지역을 포함한 인근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계기에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발표하고, 5월 중앙아 방문과 6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계기에 아시아 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마련하여 신아시아 외교를 본격화하였다.

4. 국제사회 내 역할과 위상 제고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외교와 품격 높은 문화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의 선진화와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참여 확대를 추진하였다. 특히 11월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선진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APEC, G20 정상회의와 G8 확대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고 4월과 9월의 제2차 및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5. 대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반경 확대와 재외국민 안전·보호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사서비스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해외 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또한 신속대응팀, 종합상황실, 영사협력원 제도 등 재외국민 보호 체제를 활용하여 예멘 테러 사건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등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6. 외교역량 강화

외교통상부는 급증하는 대내외적 외교업무 수요에 부응하는 선진 외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우선 업무 연계가 필요한 과(課) 단위 부서들을 통합하여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효율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와함께, 외교 인력의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고 타부처와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현재 인력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역량 개발 교육·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9년 외교정책 기조

